

# “헌혈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나눔”

광주·전남 혈액 보유량 3.5일치…‘관심’ 단계 지속  
코로나 이후 10·20대 참여 급감…단체 헌혈도 줄어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만 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나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단체 헌혈과 10·20대의 헌혈 감소로 혈액 수급난이 고착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을 크게 밑돌며 ‘관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헌혈의 집 총장 로센터. 채혈실에 마련된 15개 침대 가운데 실제 운영되는 곳은 두 자리뿐이었다. 평일 방문객이 적은 총장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예년보다 헌혈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이해정 총장로센터장은 “계절적 요인도 영향이 있지만, 연말·연초 행사와 방학 시기 해외여행 증가로 단체 헌혈이 크게 줄었다”며 “해외여행 후 4주간 헌혈이 제한돼 수급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 광주·전남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은 3.5일치에 불과하다. 혈액형별로는 A형 2.0일, O형 2.4일, B형 6.9일, AB형 4.0일이었다. B형을 제외한 모든 혈액형이 적정 수준(5일 이상)에 미달한다. 정부 기준으로 보유량 5일 미만은 ‘관심’, 3일 미만은 ‘주의’, 2일 미만은 ‘경계’, 1일 미만일 경우 ‘심각’ 단계다.  
헌혈 중이던 정세민씨(23)는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헌혈하고 있다”며 “최근



10일 광주 동구 헌혈의 집 총장로센터에서 한 시민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적십자사에서 혈액 부족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방문했다. ‘나부터 하자’는 마음이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의 청년층 헌혈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년째 이어지고 있다.  
10~20대 헌혈 건수는 2019년 14만 2980건에서 2020년 10만9814건으로 급감한 뒤 2021년 11만5758건, 2022년 10만9656건, 2023년 11만2275건, 2024년 11만1839건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생애 첫 헌혈자’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9년 2만2389명에서 코로나 첫 해

인 2020년 1만2144명으로 반토막 났으며, 이후에도 1만2000~1만50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헌혈자의 수급 구조가 무너지면서 헌혈 기반 자체가 약화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주·전남혈액원도 수능 직후 고3·수험생 대상 기념품 제공 이벤트 등 참여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혈액원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학급 수가 줄면서 10대 헌혈 인구가 자연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이후 헌혈 문화가 급격히 약해졌다”며 “30대 이상 직장인·중장년층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인의 헌혈 공개 확대, 헌혈자 예우 조례 개정 등 지역 차원의 동참 분위기 조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5·18 추모글’로 구금·제적…위자료 증액  
법원, A교사에 5190만원 선고…“중대한 인권침해”

5·18민주화운동 1주기 계시물을 작성·배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하고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됐던 A교사의 국가손해배상소송 위자료가 증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정부가 A씨에게 지급하도록 책정했던 정신적 피해 위자료 3190만원을 파기하고 5190만원으로 증액해 선고했다.  
23살 대학생이던 A씨는 1981년 5월22일 광주에서 ‘민주학우 5월 결기문’이라는 유인물 초안을 작성했다. 광주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무참히 살해됐고, 군부 독재를 추방해야 한다는 1주기 추모글이었다.  
그는 이 유인물을 학생들과 함께 700매를 제작해 대학교 등에 배포했다.  
A씨는 공수부대원들에게 붙잡혀 127일간 광주교도소 등에 구금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학 측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이유로 A씨를 제적시켰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A씨가 구금 기간 매일 밤마다 팔을 벌린 상태에서 몸통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규명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헌정질서 위반이 인정되면서 A씨는 2005년 8월 해당 대학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그는 해당 대학에 재입학한 후 교사 자격증을 취득, 교사로 근무하며 뒤늦게 꿈을 이뤘다.  
집시법 위반은 재심 재판을 통해 지난 202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재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수십년간 범죄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짊어진 채 살아왔고, 대학 졸업과 취업 등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23세의 나이에 불법 구금돼 약 30년동안 교사가 될 기회를 잃었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 ‘모두의 쉼터’ 개관 특별 초대전 10일 광주 광산구청 1층 시민문화공간 ‘모두의 쉼터’ 개관 기념 ‘건축사 특별 초대전’을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특별 초대전은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소속 건축사 15명이 50여점의 미술 작품을 선보이며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모두의 쉼터’는 민원인과 시민이 머물며 휴식·문화·소통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시민 공간으로, 광산구는 모두의 쉼터를 활용해 전시, 소규모 문화행사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 광산구 ‘하남동 안심 골목길’ 조성 완료

장수천 주변 1구간 이어 통학로 2구간 보행 안전 개선

광주 광산구가 시민 일상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하남동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이 2구간까지 마무리됐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학교가 많은 하남동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23년부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남동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을 진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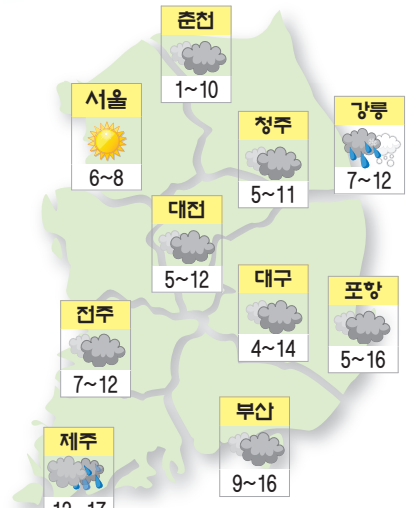
지난해 장수천으로 이어지는 1구간(산정동 1057~1059번지 일원 300m) 조성을 마친 데 이어 산정중학교부터 산정초등학교까지 통학로가 있는 2구간(산정동

1118번지 일원 250m)의 보행 환경 개선에 착수했다.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3회를 비롯해 현장점검, 디자인 의견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아파트 입주민, 사회단체 관계자, 학교 관계자 등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실시간 단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조형물 형태, 조명 밝기·색온도, 알림 조명 설치 위치 등 세부 내용을 주민, 학생 등에 공유하고, 선호하는 방향으로 반영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감성 조형물, 편히

머물며 쉴 수 있는 휴식 의자(테마형 벤치) 등을 조성해 골목길 전반을 밝고 안전한 통학로로 재탄생시켰다. 또 길말목(볼라드)에 엘이디(LED) 등을 달고, 학교와 아파트 담장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야간 보행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조도가 부족했던 구간을 중심으로 조명 위치, 밝기, 색온도 등을 조정해 보행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했다.  
학교 통학로 입구에 설치한 알림 조명(로고젝터) 디자인에는 산정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문구와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을 반영했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예보	07:30	달달	---:--
☀️	예보	17:21	달달	12:23



광주		7~12
목포		9~11
여수		9~14
순천		5~14
구례		5~13
광주		8~13
임도		9~14
흑산도		11~13
고흥		5~15
진도		9~13

목포	미물(고)	06:34 / 19:20
	샘물(저)	11:44 / ---:--
여수	미물(고)	01:28 / 14:00
	샘물(저)	07:23 / 20:19

허위 광고·무허가 학원 운영

○법무부 인증기관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무허가로 학원을 운영한 60대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고등교육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

A씨는 광산구 한 건물에서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

그는 2개 학년 4학기제 커리큘럼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원생에게 학기당 200만원을 받았다고.

해당 학원은 법무부가 인정하는 교정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또 건물 내외부에는 법무부 인증 기관이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A씨는 2022년 1월부터 교정복지사 응시생 5명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고, 2023년에는 환경관리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이 되면 100% 취업할 수 있다는 식으로 5명으로부터 266만원을 받아 갹인 혐의로 적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구속영장  
감사관 채용 과정 직권남용 혐의

‘고교 동창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김진웅 부장검사는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임영진 기자